

본보 보도가 이끈 '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진실규명

2022년 10차례 연속 탐사보도

묻혀있던 어두운 과거사 파헤쳐 진화위, 강제수용·폭행 등 인정 국가 상대 '피해자 지원' 등 권고 피해자들 "치유·회복 위한 지원"

전남일보의 끈질긴 탐사보도가 묻혀있던 지역의 아픈 과거사를 드러내며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본보가 2022년 연속 보도를 통해 실태를 고발한 '목포 옛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6차 회의에서 신청인 4명으로부터 접수된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옛 동명원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첫 인권침해 인정 사례로, 전남일보가 지난 2022년 10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한 '동명원 인권침해 실태 고발' 시리즈가 계기가 됐다. 당시 전남일보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등의 보도를 통해 오랜 침묵에 가려졌던 과거사의 어두운 실상을 파헤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보도는 그해 4월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72년부터 전라남도 목포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민간



목포 대성동에 위치한 옛 동명원 터. 1980년대 중반 무안군 청계면으로 시설이 옮겨진 후,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랑아 수용시설 '동명원'에서 발생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경찰과 공무원, 동명원 자체 단속반 등이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고 폭행, 강제노역, 강제 폐입 시설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해왔으며, 2014년까지도 유사한 행위가 지속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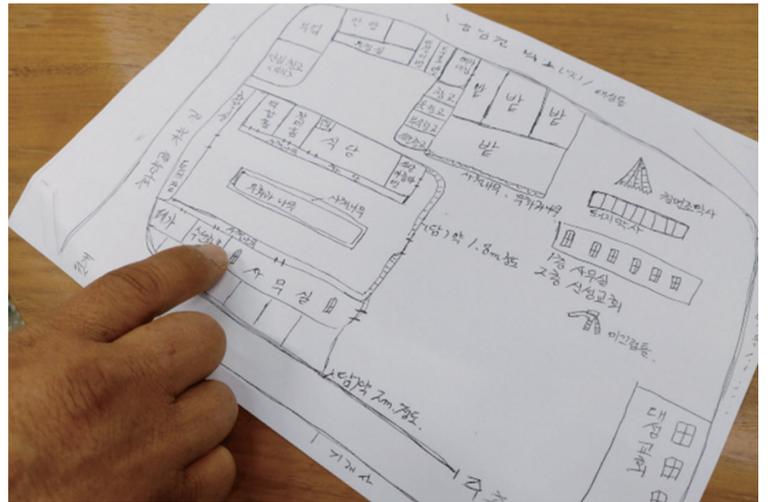
피해자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수용됐고 퇴소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1990년부터 무려 25년간 동명원에 수용된 채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단속돼 동명원에 수용된 뒤,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야 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수용 생활은 폭력과 강제노역, 비위생적인 환경이 일상이었으며, 질병에 걸려도 치료는커녕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도망을 시도하거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심한 구타와 감금이 뒤따랐고, 보호 대신 통제와 억압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다는 회고도 이어진 바 있다.

진화위는 특히 동명원이 설립한 산업폐기물 포장재 업체 (주)금호포리머에서 아동 20여 명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수용된 것을 확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수용을 묵인하고 예산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 그간 목포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에 난색을 표해왔으며, 이로 인해 진상규명은 장기



지난 2022년 2월 '목포 옛 동명원 인권침해' 피해자 김모씨가 당시 동명원 건물의 배치도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다. 전남일보 DB

간 지연돼 왔다. 그러나 본보의 연속 보도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끌었고, 이번 진화위 결정을 이끌어냈다.

진화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회복 지원 △법·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트라우마 치유 △추가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신청인 외에도 다수의 미신고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도 관련 조사와 적절한 보상 및 치유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명원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문모(48)씨는 "금호포리머에서 일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가까스로 살아

났다. 그때 후유증으로 청각장애와 정신 질환을 앓게 됐다"며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52)씨도 "진실규명 결정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과제를 마친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후속 조사와 피해자 지원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준영 기자 junjung.yoon@jnilbo.com

민주 주자, 지역공약 경쟁 속 광주·전남은 찬밥신세 전략

이재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약속 김동연 "산업·수출입은행 부산으로 지역 금융기관·정부부처 이전 '전무' 노무현 '문화수도 광주' 공약과 대조 "농식품부·기후에너지부 최적 입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역별 공약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광주·전남에는 정부부처나 국책은행 이전과 같은 굵직한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김동연 경선 후보는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각각 부산과 인천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영남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부처, 금융 공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부산으로 보내겠다는 모양새다.

충청권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내걸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는 이런 공약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기반이 약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굵직한 공약이 없다는 얘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화수도 광주 공약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등 지금의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에선 인공지능(AI)이나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사·도가 요구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경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형 금융기관이나 정부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옮기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라남도도는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북구청 건설현장 점검 광주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23일 북구 본촌동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굴착작업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와 공사 인근 주택 붕괴 위험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양배 기자

본사 이전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라는 접근 방식이라면, 미래 농업을 책임질 '농도' 전남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와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전남이 최적지라는 의견이 있다.

당내에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3월에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에는 지난 2022년 문을 연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형 인재 양성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다.

전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합작해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도 전남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에너지와 전력, 관련 대학 등을 모두 갖춘 전남이 최적지라고 본다"며 "경선 후보들이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